‘재일 동포의 고향’ 민단의 부끄러운 집안싸움



특파원칼럼
박형준 도쿄 특파원

일본 도쿄 아자부주반의 한국중앙회관 별관에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이 있다. 재일 동포들로부터 과거 사진, 옷, 책 등을 기증받아 100년의 역사를 전시해 놨다. 전시실 문을 열면 허름한 판잣집 사진부터 눈에 들어온다. ‘도쿄의 재일 한인 집단 거주지’라는 짧은 설명만 붙어 있다. 1905년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연락선이 취항했고, 그 뱃길로 조선인들이 매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제에 토지를 빼앗겨 먹고살기 위해, 태평양 전쟁 때 군수공장 노동력으로 동원돼, 일본군 위안부가 될 운명인지도 모른 채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그런 조선인들이 도쿄에 판잣집을 짓고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차별받는 재일 동포 지키려 탄생한 민단
단장 선거 파행, 그로 인한 내분으로 갈등

자료관 내 ‘자이니치(在日)’ 설명에 특히 눈길이 갔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했을 때 일본에 있던 조선인 수는 약 236만 명. 대부분이 해방된 조국으로 떠났지만 귀국해도 먹고살 길이 막막했던 약 60만 명의 조선인은 일본에 남았다. 그들이 바로 ‘자이니치’다. 자이니치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특히 한국이나 조선 국적자를 자이니치로 인식하며 고유명사처럼 사용한다.

일본에 남은 이들의 삶도 역시 힘들었다. 패전으로 일본 군수산업이 멈췄고, 해외 일본인들이 귀국하자 조선인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그들은 참정권을 얻지 못했다. 조선인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면 언론에 실명으로 보도될 정도로 차별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고 힘을 모으기 위해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결성됐다.

현재 민단에 소속된 동포 수는 약 30만 명이다. 이들을 미국, 유럽 등지의 해외 동포들과 똑같이 여기면 곤란하다. 다른 해외 동포들은 기회를 찾아 스스로 해외로 떠났지만, 민단 동포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 일본으로 흘러왔고 광복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한(恨)을 품고 산다.

그런 민단에 최근 부끄러운 집안싸움이 일어났다. 임기 3년의 민단 중앙본부 단장 선거에서 단장인 여건이 후보(72)와 부단장인 임태수 후보(59)가 맞붙었다. 2월 26일로 예정됐던 개표는 두 차례나 연기됐고, 지난달 6일 개표도 하지 않은 채 여 후보가 당선자로 발표됐다. 투표함 속 491표는 분쇄기로 파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임 후보의 범죄 혐의 전력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반발한 민단 간부 20명은 즉각 정상화위원회를 꾸려 임시중앙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선관위와 여 단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여 단장 측은 선거에 문제를 제기한 민단 임직원을 해직하거나 회의 멤버에서 제외하며 맞섰다.

민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대로 민단은 ‘재일 동포의 고향’이고, ‘1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한국 정부도 일본 내 유일한 재일 동포 공인단체로 보고 연간 약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선거 문제는 양측 합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임 후보의 후보 자격이 없는 게 맞는지, 2018년 임 후보가 부단장으로 임명될 때는 동일한 문제가 없었는지, 이에 따라 선관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면 된다.

여 단장은 올해 신년회 축사 때 한일 정치 갈등을 언급하며 “상식에 기초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경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민단에도 똑같은 게 필요하다. lovesong@donga.com

임용한의 전쟁사 〈161〉 만들어진 영웅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뒤를 캐보면 기나긴 역사의 뿌리가 있다. 어떤 것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걸 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가끔 무섭기도 하다.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수단을 만난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이곳을 누비아라고 불렀다. 이집트 유물에 누비아인들이 곧잘 등장한다. 파라오가 누비아인을 정복하는 벽화도 있고, 목에 밧줄을 걸고 포로가 되거나, 공물을 운송하는 누비아인도 있다. 누비아인 파라오 상도 있다. 누비아인은 거친 전투 민족이었다. 이집트는 누비아인을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한때 이집트를 정복한 적도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누비아는 이집트와 티격태격하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대개는 이집트가 누비아를 속국처럼 지배하는 형태였다.

4000년이 지난 1948년 1차 중동전, 이집트군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치스러운 패전을 겪는다. 이집트군이 멋지게 승리한 전투도 있었다. 아슈켈론 동쪽 알 팔루자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집트군 3개 대대가 이스라엘군에게 포위됐다.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종전 때까지 이집트군은 버텨낸다. 이 전투에서 제일 잘 싸운 부대는 수단 대대였다. 최고 영웅은 검은 이리라고 불린 수단인 사이드 타하 대령이었다. 하지만 종전 후 영웅이 된 사람은 이집트인 가말 압델 나세르 소령이었다. 나세르는 이때의 인기로 이집트 국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1953년 쿠데타 성공 후 종신 대통령이 된다.

나세르는 유능한 장교였고, 팔루자 전투에서 훌륭하게 싸웠다. 그러나 타하 대령은 더 큰 공을 세우고도 그만한 영웅이 되지 못했다. 나세르는 인기를 더하기 위해 팔루자 전투 경험담을 상세하게 저술했는데, 타하 대령의 활약은 거의 서술하지 않았다. 타하는 유능한 군인이었고, 이집트인이 기대하는 영웅은 국가를 수렁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군사적 영웅은 전장에서 탄생하지만, 국가의 영웅은 국민이 선택한다. 가끔 그 기준이 감정과 환상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역사학자

社說

남은 1년도 ‘내 갈 길’ 간다는 文, 국가역량 한데 모을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했다. 집권 4년 공과(功過)를 설명하고 남은 1년 국민 협조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문 대통령은 ‘마이 웨이’ 태도를 고수했다.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부분 조정을 하겠다고 한 게 그나마 한 발 물러선 사례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나 코로나 백신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송구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있다”며 야당과 언론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 국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보일 리도 없었다.

일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 인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사권자로서의 고충도 많겠지만, 해외 유명 관광지의 세미나에 온 가족이 동행하거나 유럽산 도자기를 대량 반입하는 등 좀스럽고 낯 뜨거운 행태가 새로 드러났으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보다는 제기된 의혹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성 친문 세력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적절치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과 사법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또 비켜갔다.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기존의 태도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글로벌 팬데믹 위기 속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당장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급하다. 남은 1년, “나와 우리 편이 옳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국가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없다.

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J노믹스 4년’의 자평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어제 특별연설에서 말했다. “위대한 국민” 덕이라고 하면서도 K방역,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이끌었다는 점도 내비쳤다.

당초 정부가 3.2%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이제 4%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억눌렸던 세계적 소비심리의 폭발로 반도체 가전 자동차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작년 한국이 −1.0%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3.1% 플러스 성장을 한 대만이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도 7%대 성장이 점쳐질 정도여서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성장률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 회복인데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1분기 고용률은 58.6%로 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 1분기에 비해 1%포인트 떨어졌다. 현 정부 초 급등한 최저임금의 여파로 지난 4년간 주 40시간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195만 개 줄고, 40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만 213만 개 늘었을 정도로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를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지원금을 빼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해 현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길어질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아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민간의 성과가 정부의 ‘치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은 공허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성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의 의결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김학의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더 큰 정당성을 얻게 됐다. 이 지검장은 스스로 소집을 요구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검장이 기소 전 사퇴하지 않으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첫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정권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데 앞장선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 왔다.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다툴 일이지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만으로도 큰 오점을 남겼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논의가 된 안건은 2019년 3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번호를 이용해 그의 출금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와 출금을 실행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미 기소돼 있다. 비록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 국민적 분노를 산 김 전 차관이지만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조치를 처벌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인으로 구성돼 상식에 가까운 판단을 하는 수사심의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등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한동안 수사심의위가 유명무실화했다. 검찰은 이번 권고를 적극 받아들이고, 수사심의위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공동성명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한다!”
“특정 학과 이기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심리서비스법을 반대한다!”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검증되고 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학부에서 상담심리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으로 학사학위을 받은 후,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후 상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가 2020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의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과제 체결 후, 2020년 12월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심리서비스법률(안)에 따르면 심리학 전공자만이 '심리사' 자격으로 '심리서비스'를 하고 '센터'를 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학과의 폐쇄적이고 이기적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현대 학문의 개방, 융합, 확장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오도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상담학의 효과와 전문성을 무시하는 한국심리학회의 작태에 대해서 반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를 대표하는 (사)한국상담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를 대표하는 (사)한국상담학회와 그 외 유관 학회들간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심리상담사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사)한국심리학회와 심리서비스법률안을 마련한 연구진들은 '심리상담' 분야에 가한 충격과 혼란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사)한국심리학회는 현재 추진 중인 심리서비스법을 폐지하고 심리상담관련 전문가들을 포용하는 법률안 마련에 동참하라.

2021. 4. 28.

(사)한국상담학회 제11대 운영진 및 3만 회원 일동